

전과정적 측면에서의 국내외 녹색정책 평가*

신 민 경(이화여대 박사수료) · 정 순 희(이화여대 교수)

미래예측과 환경개선을 위해 제품에서의 전과정적 접근을 통한 평가 즉 생산, 소비, 폐기 단계의 환경적 영향력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같은 맥락으로 녹색정책도 계획, 실행, 관리 측면에서 환경적 영향력을 평가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는 녹색정책의 목표와 주체가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졌는가를 바탕으로 평가할 수 있다. EU의 녹색정책은 전과정적 사고, 시장원리의 이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지속적인 개선, 정책수단의 다양성이라는 5가지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녹색정책을 전과정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국내 녹색정책의 문제점과 실효성 제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정책 자료 및 연구 자료를 통한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해 살펴본 결과 많은 나라에서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들은 산업성장과 경기회복을 동시에 달성하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국가가 지출하는 재정투자 가운데 장·단기적으로 온실가스 저감에 도움이 되는 정부 부문의 지출인 ‘녹색경기부양(green stimulus)’은 각국의 그린펀드 규모를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단기 및 중·장기에 해당하는 정책 목표의 설정을 통해서 지출되고 있다.

단기 정책목표인 경기부양과 관련된 자동차·주거 부문의 투자는 호주, 일본, 독일이 중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력·철도·물·재활용 사업이 속하는 인프라 부문의 중장기 목표는 우리나라·이탈리아·중국·스페인·프랑스가, 신재생에너지 기술 투자와 관련된 신산업 부문은 EU·미국·캐나다가 중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활용·자동차·철도·주거 부문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투자비용이 크지만 향후 감축비용은 적고, 시멘트·농업·신재생에너지·철강 등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투자비용이 적지만 향후 감축비용이 큰 대표적 부문이다(Global GHG Abatement Cost Curve v2.0). 많은 국가에서는 각 비용의 크기와 상관없이 대부분 생산 단계, 기업의 역량, (규제보다는) 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었다.

<표 1> 부문별 감축 비용과 투자비용의 크기

	低 → 高					
감축 비용	주거	재활용	자동차 철도	시멘트 농업	삼림 화학제 석유와 가스	신재생에너지 철강
투자 비용	시멘트 농업	삼림 화학제 석유와 가스	신재생에너지 철강	재활용	주거	자동차 철도

* 박사논문 준비 자료의 일부이며, 향후 본 내용과 관련하여 전문가 집단의 설문조사를 진행할 것임.

녹색경기부양을 위해서는 투자비용과 감축비용을 모두 고려해야 하지만, 투자자들은 미래의 낮은 감축비용보다 현재의 낮은 투자비용을 선택하고, 이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감축비용을 더욱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재활용, 자동차, 철도, 주거와 관련된 감축비용은 소비자와도 관계가 깊다. 따라서 높은 투자비용으로 인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을 중심으로 정책이 설계된 것은 향후 감축비용에 또 다른 문제(소비자 측면)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소비자 측면의 효과적 정책도 요구된다.

이처럼 각 정책의 목표가 첫째 생산·소비·폐기 중 어디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가, 둘째 정부·소비자·생산자 중 누구의 역량을 중요시 하는가, 셋째 규제와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을 함께 평가한다면 향후 녹색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의미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